

## FOCUS

### 불량레미콘 공급 원천봉쇄

건설교통부는 9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하 국토관리청에 불량레미콘 반입과 관련하여 서면답변을 통해 불량레미콘을 공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으로서 불량레미콘을 생산하여 건설현장에 공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판매가 원천봉쇄되는 등의 제재가 한층더 강화된다.

건교부는 그동안 산하 국토관리청 건설현장에 반입된 불량레미콘이 소량이고 품질기준에 크게 미달되지 않아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반품조치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제재조치를 강화해 품질기준에 크게 미달되는 등 불량정도가 심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판매 정지를 요청하는등의 불량레미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미 96년도 1월부터 불량레미콘 생산업체에 대해 판매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한 바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불량품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부순모래활용 유동화콘크리트 개발

골재중 강모래 부족의 여파로 쇠석골재의 사용이 늘고있으며, 공영토건이 부순골재를 이용한 현장유동화 콘크리트를 개발하여 골재분야의 새로운 장을 열게되었다.

건설업계에 의하면 공영토건은 부순모래를 이용하면서도 품질과 시공성을 확보할 수 있

음은 물론 강모래를 사용할 때보다 가격을 5~10% 낮출수 있는 레미콘을 청주대학교 건축재료·시공연구회와 공동으로 개발 실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공영토건은 부순모래의 경우 미립분의 함유량이 많고 입상이 불량해 레미콘의 품질저하와 현장시공성의 저하를 초래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투입시멘트의 8%를 플라이애쉬로 치환하고 현장에서 부순모래와 바다모래를 절반씩 섞어 만든 레미콘에 국산 유동화제를 혼합하여 타설하는 '현장 유동화 부순모래 콘크리트'를 개발하여 분당 사옥현장에 시범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공영토건은 이 레미콘의 경우 유동성이 뛰어나 작업성과가 높은데다 높은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가격면에서도 강모래를 사용한 레미콘보다 5%이상 낮출수 있다고 밝혀 앞으로 레미콘업계의 원가절감의 한 방편으로 널리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멘트 할당관세 적용

재정경제원은 지난 12월 3일 산업경쟁력 강화와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기초원자재인 고철, 원목등 15개품목과 H형강, 화강암등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38개품목 시멘트, 선재등 13개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H형강, 합판, 화강암등 38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98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산업활동에 긴요한 기초원자재로 수입이 불가피한 고철, 원목, 선철 등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최저세율을 적용해 경쟁력강화를 지원하고 시멘트, 슬랩, 선재 등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이나 기본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원재료수급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80여개 품목 중 수입가격이 크게 하락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전램프 부품등 10개 품목을 추가, 68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 환율급등의 여파로 시멘트가격 인상

환율인상으로 인한 수입원자재의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건설자재 원가관리에 초비상이 일고 있다.

특히 시멘트가격 인상을 필두로 환율급등에 따른 파급효과는 건자재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레미콘등 2차제품으로의 파급효과가 커 향후 건재가격인상 도미노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되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양시멘트는 11월 28일을 기점으로 벌크 및 포장시멘트의 가격을 7.18%와 7.19%를 각각 올려 출고를 시작했으며 포장시멘트는 대당 2천184원(공장도가, 부가세포함)에서 2천341원으로 157원, 벌크는 톤당 5만1천959원에서 5만5천699원으로 3천 740원을 각각 올렸다.

이에 동양시멘트는 시멘트제조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벅커C유가 22% 오르고 철도요금 3% 전력료 5.9%등 물류비가 인상된

데다 환율이 96년대비 24%가 올라 자체에서 인상요인을 감수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혀 이번 가격인상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멘트값인상은 가격자율화이후 처음 조정된 것으로 아직까지 가격인상방침을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여타 업체들의 가격인상도 잇따를것으로 보인다.

## 정부의 조달청 공사계약 축소

국가기관의 조달청 계약요청 대상공사가 현재보다 축소되는등 조달행정 규제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 10월24일 행정쇄신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선정한 조달행정의 개혁과제로 행정내부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날 행정쇄신위원회 실무회의에서 현재 국가기관의 공사예정금액 20억원이상 공사는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계약의뢰토록 하고 있으나 개별적 공사의 기술적 특성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조달청 계약요청범위를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 이상의 공사로 상향조정하여 결과에 따라 나타나는 효과로 단계적인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하여 정부는 금년 상반기중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쇄신위원회는 또 계약변경의 경우 수요부처에서 변경설계한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후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는 조달청에서 변경계약토록 하고있어 사업지연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시설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변경계약도 수요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되 수요기관이 희망할 경우에만 조달청에 맡기기로 했다.

## 산업환경실천과제

정부와 민간기업의 산업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설비 투자 및 청정생산기술개발등 산업계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산업환경 실천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통상산업부는 지난 11월 5일 날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 환경친화적 생산기술개발과 청정생산설비 투자등 산업계의 환경실천과제를 발굴, 추진키로하고 한국기계공업진흥회, 한국철강협회등 업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통산부는 98년에는 산업환경 실천과제 추진업종을 13개업종으로 확대하고 청정생산기술 개발자금과 환경설비투자자금 등 총 7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친화적생산기반을 구축키 위한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투자와 환경설비산업의 육성을 위해 금년 450억원보다 17.3%가 늘어난 5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산부는 이에따라 12월 까지 시멘트, 철강, 비철, 환경설비등 13개업종의 16개 사업자단체를 통해 실천과제 제안서를 받고 환경실천과제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기술이나 환경친화적제품을 생산하는 청정생산기술과제등 기술개발과제와 청정생산설비의 설치를 지원키 위한 투자과제로 나눠 추진한다고 밝혔다.

## 건설공사 외주비 증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공사중 87년부

터 96년까지 완성공사에 있어 원가요소별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현재의 건설공사가 대형화·고급화·전문화 되면서 공사에서 외주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대신 노무비의 비율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97년 11월 5일 대한건설협회가 전국 3천 542개 건설업체가 시공한 공사비 1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원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87년 완성공사에서 외주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27%였으나 10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47.53%로 크게 높아졌다.

반면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87년 20.46%였으나 지난해에는 12.85%로 대폭 낮아졌으며 재료비 비율역시 35.41%에서 28.57%로 각각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건설공사에서 외주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건설공사가 날로 대형화·전문화되면서 단순시공분야의 전문업체 하도급이 늘고 있는데다 건설산업기본법에 공사의 일부분을 의무적으로 하도급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의 경우 노무비와 현장경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목공사현장의 대부분이 교외에 있어 근로자 확보곤란에 따른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하고 기계화시공이 진전되면서 현장경비중 기계경비의 비중이 증대되고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하였다.

공사규모에 따라서는 규모가 크고 공기가 길수록 외주비 비중이 높고 노무비 비중은 낮은 특징을 보였다고 한다.

■ 공종별 구성비

(단위:%)

구 분	재 료 비	노 무 비	외 주 비	현 장 경 비	계
전 체	28.57	12.85	47.53	11.05	100.00
토 목	20.12	17.02	46.44	16.42	100.00
건축	31.63	11.26	48.10	9.02	100.00

즉 1억원 이상~5억원미만 공사에서는 외주비 비중이 낮고 재료비 노무비 현장경비의 비중은 높은 편이었으며 200억원이상 대형공사에서는 노무비 및 현장경비의 비중이 낮은 대신 재료비와 외주비 비중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료비 비중은 200억원 이상공사의 32.79%, 5억원미만공사의 30.62%를 제외하고는 모든계층에서 20%대로 나타났다.

이에비해 공기가 1년이하 공사의 경우 노무비의 비중이 높고 외주비의 비중은 낮았으며 재료비 비중은 공기 37개월이상 공사에서 20.5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외주비 비중은 공사기간이 짧을수록 낮았으며 현장경비 비중은 37개월이상에서 가장 높게, 13~36개월공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외주비 비중이 낮고 재료비 노무비 현장경비 비중이 비교적 높은 반면 대기업은 그 반대현상을 보였다.

특히 소기업과 중기업의 경우 외주비 비중이 35.08%와 45.43%로 현행 의무하도급 비율 20~30%를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업계에서는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10억원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일정부분을 반드시

■ 규모 및 기간별 구성비

(단위:%)

	구 분	재 료 비	노 무 비	외 주 비	현 장 경 비	계
공 사 규 모 별	1-5억원미만	30.62	29.12	36.36	13.91	100.00
	5-10억원미만	28.75	23.95	34.83	12.46	100.00
	10-30억원미만	23.96	18.48	45.46	12.10	100.00
	30-50억원미만	22.59	13.11	53.89	10.41	100.00
	50-100억원미만	22.57	11.70	55.26	10.48	100.00
	100-200억원미만	25.92	10.23	52.27	11.57	100.00
	200억원이상	32.79	7.85	49.28	10.08	100.00
공 사 기 간 별	1-3개월	30.86	21.74	36.66	10.73	100.00
	4-6개월	29.25	24.06	34.50	12.19	100.00
	7-12개월	26.99	18.72	42.48	11.81	100.00
	13-36개월	31.51	9.23	49.16	10.11	100.00
	37개월이상	20.52	13.39	53.24	12.85	100.00

■ 연도별 완성공사 원가요소별 구성비 추이

(단위:%)

구 분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재 료 비	35.41	33.66	34.32	34.00	31.58	30.08	29.73	30.25	28.50	28.57
노 무 비	20.46	20.16	21.07	19.08	18.92	17.85	16.72	14.58	13.63	12.85
외 주 비	30.27	33.57	31.52	35.72	37.73	41.02	42.66	44.66	46.69	47.53
현 장 경 비	13.86	12.61	13.09	11.20	11.77	11.05	10.90	10.71	11.18	11.05
기 계 경 비	5.11	4.66	4.94	3.98	4.26	4.12	3.95	3.11	3.22	3.05
공 사 원 가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돼있는 의무하도급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그문제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도급순위별로는 상위군인 1·2군에서 외주비 비중이 높고 노무비 비중이 낮았으며 하위업체로 갈수록 그 반대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의 지난 10년간 완성공사 원가요소별 구성비율 추이를 보면 위와 같다.

## 2차 개발촉진지구 도로사업 본격화

건교부는 총 80억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하는 2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7곳에 총연장 182km의 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제2차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한 7곳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금년내 23개 도로 총연장 182km에 대한 실시설계에 착수, 사업을 본격화해 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어 오는 99년부터 총 사업비 3천350억원 정도가 투입될 23개 도로 건설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 공사에 착수함으로써 낙후된 개발촉진지구의 기반시설 확충을 도모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제2차 개발촉진지구내 도로실시 설계비로 80억원을 계상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관련 제2차 개발촉진지구내에는 모두 27개 도로 총연장 205.9km에 대한 신설·확장이 계획돼 있는데 이중 통산부 등 타부처에서 지원하는 도로와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도로사업을 제외한 23개소 182km에 대한 도로사업이 건교부 지원하에 추진된다고 밝혔다.

제2차 개발촉진지구내 주요 도로사업을 보면 강원 영월·화천지구에서는 북쌍~신천간

도로(사업비 113억원) 및 △상동~봉화간(130억원) △거례~삼화간(36억원) △화천산업도로(103억원) 신설·확장이 추진되고 충남 홍성지구에서는 임해관광연계도로(124억원)와 서해안 임해관광도로(354억원) 사업이 펼쳐진다.

충북 영동지구에서는 마산~우매간(173억원)을 비롯 △구촌~시금간(260억원) △설계~회동간도로(28억원)가 확충되고 전북 장수지구에서는 장수관광순환도로(687억원)와 장계IC~가곡리간(92억원) 도로사업이 추진된다.

전남 곡성·구례지구에서는 섬진강변도로(108억원)와 △산동~고달간(226억원) △구성~신평간도로(106억원)가, 경북 산악형지구에서는 영주·순흥간(144억원)과 △부석~부석사간(43억원) △봉현~예천상리간(39억원) △동부~교촌간(150억원) △수하~울진왕피리간(89억원) △본신~수하간(76억원) △송하~죽파간(46억원) △수비~송하간(108억원) △수하 사슴관광농원 도로(7억원) 사업이 각각 실시된다.

이밖에 경남 의령·합천지구에서는 자굴산관광순환도로(249억원)와 초계·적중 외곽도로(245억원)가 건설된다.

한편 건교부는 올해 제1차 개발촉진지구내 간선시설 설치비로 700억원을 확보, 9개 개발촉진지구내 도로 19개소 134.7km에 대한 신설·확장 사업을 신규 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해외건설 80년이후 최대 호황

국내 경기침체속에서 기업 및 건설사들의 연쇄부도와 금융위기상황에서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해외건설협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면 97년도 국내건설업체들의 해외공사 계약 실적은 107억 3천만달러로 지난 80년 이후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같은 해외건설의 호황은 국내의 경기상황에서 이룩한 것이어서 그 빛을 받는다.

해외건설협회는 최근 업계의 해외수주 활동상황을 살펴보면 연내 수 건의 대형공사 신규수주가 가능하였고, 97년 한해 계약액이 연초 목표액 120억달러를 넘어 사상최대 수주를 기록했던 지난 81년의 137억달러도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건설이 이처럼 호황을 누리게 된 것은 건설업계가 그동안의 단순시공에서 벗어나 Build Operate Transfer와 같은 개발형공사 등으로 사업의 형태를 다양화하고 건설수주시장도 다변화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SOC 민자사업 늦춰진다

정부의 IMF의 자금지원요청이후 SOC민자유치사업의 착공시기가 늦어진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2월 3일 개최한 SOC민자사업 대토론회에서 건설교통부의 남동익 수송심의관은 주제발표를 통해 IMF지원에 따라 사업축소 등 금년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예상되는 SOC민자유치사업에 대해 “정부는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경제여건을 감안해 공사의 착공과 고시시기 조정 등 사업추진의 완급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 심의관은 에에따라 “현재 사업시행자가 지정돼 공사중이거나 곧 착공할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지만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에 있는 사업은 사업자 선정후 실시계획승인시 기업의 자금조달 여력 등을 감안해 착

공시기 등을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규모 사업위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의 위험부담증가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대상사업의 규모와 관련 사업비 1조원이 상의 대규모 사업보다 2천에서 2천 500억원 규모의 터널, 교량 등 중소형 사업을 적극 발굴키로 하는 한편 BTO방식에 따라 정부에 기부후 무상사용하는 기간도 기존 30년에서 10-15년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달중 재경원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예정이던 대구-대동간 고속도로사업(1조2천 198억원규모)과 경인운하사업(1조6천229억원) ▶현재민간사업자와 협상이 진행중인 인천국제공항 기내식(1천53억원)·항공기정비고(1천904억원)·지상조업장비 정비시설(300억원)사업은 사업착공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달중 재경원 위원회 심의후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위해 준비중인 중부(4천 35억원)·영남(6천49억원)·호남권(6천344억원) 복합화물터미널과 중부ICD(1천129억원), 서울 외곽순환도로(1조9천223억원) ▶이에 12월중 건교부 위원회 및 재경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 예정이었던 인천국제공항철도(3조2천400억원) ▶98년초 기본계획 고시 예정이었던 대전-당진(1조6천632억원) 구미-옥포(1조2천131억원)고속도로건설공사는 고시시기등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수익성 검토 및 추진방안을 검토중인 동서고속철도(6조9천억원)와 2차 례고시에도 사업신청자가 나서지 않던 부산-김해경량전철(8천428억원), 지자체간 PMFY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서울-하남

경량전철(2천227억원), 기본계획검토중인 의정부 경량전철(4천490억), 경부고속철도 청안역사(948억원) 등의 민자유치사업은 앞으로 축소 또는 폐기될지도 모르는 운명에 놓이게 됐다.

##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천다짐 결의대회

통상산업부는 지난 12월 12일 최근 우리경제의 일부대기업의 연쇄부도와 이에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발생등으로 경기의 침체 및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환으로 국민모두가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통상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도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동참할수 있도록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천사항』을 각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각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실천다짐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외화절약, 근검절약의 분위기가 확산될수 있

도록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천사항으로

첫째, 외화절약 대책으로 ①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전면금지 ② 가족의 개인적 해외연수, 해외여행의 술선자제 ③ 자국적 항공기 이용으로 외화유출방지 ④ 불요불급한 해외훈련대폭 감축을

둘째, 예산절감대책으로 ① 연도말 불요불급한 사업비 집행억제 ② 사무용품, 출장여비 등 경상경비 감축 ③ 불필요한 정부행사 및 국제행사 유치자제

셋째,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해 ① 검소한 연말연시 보내기(호화송년·신년회자제) ② 보유외화 및 외화잔금 예금하기 ③ 호화사치품 사용자제 ④ 저축더하기 운동 전개

넷째,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으로 ① 승용차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 ② 절전·절수·적정 실내온도 유지등을 골자로 정부 및 유관단체에서 술선수범하여 모든국민이 동참한 가운데 국가경제의 안정을 되찾을수 있다고 덧붙였다.